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을 위해서는 충청권을 자립적 지역경제권역으로서 세계도시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충청권을 행정도시 광역권, 서해안권 및 내륙권으로 구분해 행정도시 광역권은 정치·행정 및 중추관리기능을 중심으로, 서해안권 및 내륙권은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주장은 19일 오후2시 '대전예술의전당'에서 있었던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숍에서 공주대 최원희 교수가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충청권 지역구조 변화와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됐다.

또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춘용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이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구축은 행정도시만이 아닌 주변도시와 네트워크 차원에서 교통계획시설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을 토대로 역할 분담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종찬교수(고려대)는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한 충남 지역산업·경제의 발전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충남 산업발전의 효율성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허브-스포크형 클러스터(거점과 중소클러스터 연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지역산업 및 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교수(한밭대) 등 6명의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각각의 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을 주최한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은 "행정도시가 충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장미빛만은 아니다"며, "전문가들과 협의해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청권의 발전전략

최원희 | 공주대 교수

충청권이 I자형 도시축의 광역도시권과 그 주변의 서해안권 및 내륙권이 균형발전될 때, 비로소 충청권이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충청권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의 성장거점전략, 네트워크 도시체계 전략, 개성화전략 등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성장거점 형성 전략은 행정중심도시, 대전, 청주, 천안 등의 도시로 이루어진 행정중심도시 광역권의 일방적인 흡인력에 대응하여 서해안권과 내륙권의 일정지역에 성장거점도시 내지 성장거점도시권을 육성하고, 기존 중소도시의 재활성화를 통해서 중심성을 확보하며, 신활력도시 등 다양한 신개발방식을 도입한다. 네트워크 도시체계 전략은 산업적 측면에서 소중역, 광역 및 초광역의 지역혁신체계 형성, 격자형 고속 교통망 구축, IC 연접부 개발 등 새로운 활력거점의 창조 등을 포함하며, 상호연계를 통한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개성화 전략은 지역문화권 육성, 특화관광자원 개발, 농산어촌 신자원 활용 등을 포함하며, 이는 충청권의 자연, 인문, 사회적 특성을 최

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성장거점개발 전략, 네트워크 도시체계 전략 및 개성화전략에 의거하여 충청권의 균형발전전략을 설정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충청권을 행정중심도시 광역권, 서해안권 및 내륙권으로 구분하고, 행정중심도시 광역권은 정치, 행정 및 중추관리기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체계화 하고, 행정중심도시 광역권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서해안권 및 내륙권은 각각 특정 성장거점도시나 성장거점도시권, 공공기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육성과 기존도시 특화, 기성시가지 활성화 등의 단계를 거쳐서 네트워크 도시체계화 하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중심도시권, 서해안권 및 내륙권을 상호간의 기능적 보완성에 기초하여 하나의 통합적 네트워크 도시체계로 연계시켜서, 충청권을 자율적 경제권역으로서의 세계도시지역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

행정도시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방안

이춘용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개별 신도시 건설 또는 단일 기능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자족적이며 국토공간구조를 다원화하는 행정도시이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환경친화적이며 삶의 질이 향상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생활양식이 전개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구축은 행정도시만이 아닌 주변 도시와 네트워크 차원에서 교통시설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사통팔달의 신속한 접근이 가능한 간선교통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행정도시뿐만 아니라 국토의 거점이 되는 충청권의 연계 발전도 가능한 간선교통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을 토대로 역할 분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광역교통체계를 완비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 그리고 인접 시·도간 충분한 협의와 협력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교통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관련 재원의 축소 및 한시적인 교통세 운용

기간 등 악조건 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재원운용은 중앙과 지방이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부문간·부문내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은 특정지역의 논리보다는 충청권과 도시 네트워크 형성 차원에서 우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수립될 광역도시계획에서 이용자 중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 연계한 충남 지역산업 발전방향과 전략

박종찬 | 고려대 교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한 충남 지역산업 및 경제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 산업발전의 효율성과 지역내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허브-스포크형 클러스터(거점과 중소클러스터 연계, 인접 시·도간 거점 클러스터 연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충남이 취약한 지식기반 인프라를 대덕연구단지를 활용해 확충하여 충남의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권역내 허브 클러스터(오창, 대덕)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도권 및 해외 클러스터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포괄하는 혁신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충남의 전략산업은 산업의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조정기라는 4단계의 제품주기를 고려하여 진입기 내지는 성장기의 산업을 선정하고 시장성이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 이들 전략산업은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즉, 전략산업이 지역 내의 전통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는데 기여해 지역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의 산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남의 전략산업 육성을 활용해 충남의 지역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 의료 및 교육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 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 천안은 혁신거점, 창출거점, 지원거점 기능이 종합된 중핵적인 과학혁신거점화한다.
- 천안과 아산을 잇는 전자·정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과학기술집적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아산, 서산, 보령, 서천을 잇는 정밀기기, 자동차관련 과학기술집적네트워크 구축한다. 아산은 기술창출형과 산업진흥형으로 과학기술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

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협동을 강화하고 모기업의 중앙연구소와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 천안, 공주, 연기를 잇는 영상애니메이션 과학 기술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 논산, 금산을 중심으로 한 BT(특히 인삼을 중심으로 한 생약개발) 과학혁신 거점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기회로 충남의 서비스업을 획기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충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소득을 증대함은 물론 경기안정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한국 전체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안정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선진국형 산업구조의 건설을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통주력 제조업의 만으로 는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증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 한국의 1992~2003 년 고용증감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기간 중 313 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농림어업 △72 만, 제조업 △78 만, 광업 △4 만 명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454 만 명이 증가하여 고용증가가 서비스업에서 창출되고 있다.
- 첨단기술산업은 고용창출 없는 성장의 속성으

로 부가가치는 창출하지만 고용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충남의 경우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를 활용해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창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 토론 내용

1. 행정중심도시는 **충남지역의 서비스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R&D 발전의 계기**가 되어,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교통망, 사회간접자본, 정보통신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등의 서비스 산업 육성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을 활용하여, 행정교육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을 포함해 충남의 서비스업을 비중을 높여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박종찬 고려대 교수)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기회로 충남의 서비스업을 획기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충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한국 전체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노력이 필요(박종찬 고려대 교수)
- 충남 서북부지역의 제조업 기반 구축과 함께 충남의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함으로써 충남의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고 충남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함(박종찬 고려대 교수)
- 행정도시는 충남 지역경제가 지닌 취약한 지식기반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강현수 중부대 교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결과

2. 행정중심도시와 지역발전과의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도시의 기능도 약화됨

문제점

- 주변지역을 흡수하고, 대전·청주간 연담화 가능성이 있음(최영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행정중심도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주변지역을 공동화시킬 우려가 있음(강현수 중부대 교수)
- 행정도시로의 수도권 인구유입보다 주변지역에서의 인구유입이 많을 것임(강현수 중부대 교수)

대책

- 행정중심도시를 계기로 발전기반이 취약한 주변도시도 행정중심도시와의 기능적 연계를 통하여 공동 발전될 수 있어야 함(최원희 공주대 교수)
- 주변지역의 도시기반이 확충·정비되어야 하고, 중앙정부가 행정도시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주변 도시 정비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함(최원희 공주대 교수)
- 행정도시의 이질적 문화는 지역문화와 충돌할 가능성 있음. 주변지역의 지역 자긍심과 지역문화를 특화 육성하는 조치가 필요(최영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서해안은 관광·레저시설, 충남내륙지방은 복합적 재개발(레저, 생산, 주거, 문화, 여가, 연구개발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함(신동호 한남대 교수)

3. 주변 도시·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주변 국내교통망, 국제교통망(청주국제공항 및 당진항 개발)이 첨단형 교통체계로 구축되어야 함

- 행정중심도시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청주국제공항과 당진항도 국제기능을 확보하여야 함(권영종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행정중심도시의 급행연결망, 경전철 등 첨단형, 친환경 대중교통체계가 갖춰져야 함(김황배 남서울대 교수)
- 향후 수립될 광역도시계획에서 이용자 중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이춘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주변 도시·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교통체계를 先 (광역)교통계획 後 토지이용계획·도시개발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함(김황배 남서울대 교수)

4. 지역불균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시책에서 충청지역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부문·공간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문제점

-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라 충청권 지역구조가 경부축 중심의 I자형 도시축으로 재편되어, 서해안권과 내륙권 중소도시들은 상대적인 저성장을 면하지 못할 것임. 서해안권과 내륙권 중소도시들의 쇠퇴는 배후지역의 쇠퇴를 동반하여, 결국 서해안권과 내륙권 전체의 쇠퇴를 유발할 것임(최원희 공주대 교수)
- I자형 도시축은 서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가능성보다는 서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인구와 기능을 일방적으로 흡수해서 거대도시권 기능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음(최원희 공주대 교수)

대 책

- 충청권의 서해안지역과 내륙지역에 경부축 거대도시권과 상호보완할 수 있는 각각의 도시권이 형성되어, 중국에는 서해안도시권, 경부축도시권 및 내륙도시권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된 통합 도시권이 형성될 때, 충청권내의 균형발전을 물론 충청권이 비로소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음(최원희 공주대 교수)
- 충청권을 행정중심도시 광역권, 서해안권 및 내륙권으로 구분하고, 행정중심도시 광역권은 정치, 행정 및 중추관리기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체계화하고, 행정중심도시 광역권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서해안권 및 내륙권은 각각 특정 성장거점도시나 성장거점도시권, 공공기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육성과 기존도시 특화, 기성시가지 활성화 등의 단계를 거쳐서 네트워크 도시체계화 하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중심도시권, 서해안권 및 내륙권을 상호간의 기능적 보완성에 기초하여 하나의 통합적 네트워크 도시체계로 연계시켜서, 충청권을 자율적 경제권역으로서의 세계도시지역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바람직(최원희 공주대 교수)
- 충청지역내 불균형을 예방하고 행정도시건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남 서해안권 및 내륙권이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역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강현수 중부대 교수)
- 서해안, 충남 내륙지역의 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특성(관광, 역사, 문화 등)에 맞는 발전방안과 대규모 생산·물류(농축산 Bio, 첨단산업) 기능확충이 필요하며, 이는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요청됨(최영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